

# ‘전주형 그린뉴딜’ 본격화

# “후백제 전환 관련 유적 동고산성 사적 지정해야”

### 정부 그린뉴딜 정책 연계 녹색공간·녹색자원·녹색산업 전환 등 3대 전략 추진

전주시가 녹색공간과 녹색자원,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전주형 그린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전주형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에너지 자립도시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원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분야·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녹색공간 전환 ▲녹색자원 전환 ▲녹색산업 전환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한다.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부터 에너지를 제로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한편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탄소를 저감하는 그린 숲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그린도시(팔복순 Net-Zero 타운) 사업이 팔복동 산단 지역에 총사업비 164억원이 투입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터로서의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녹색 탄소 ICT 마을 숲’과 ‘스마트 그린 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된다.

녹색자원 전환의 경우 생태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면서 플라스틱 생태계를 혁신하는데 공을 들인다. 생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동시에 친환경 차량의 충전 편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메가스테이션 조성에도 주력한다. 메가스테이션은 대규모 충전시설과 도서관, 식당, 식료품점, 미래차 전시체험관 등을 갖춘 대형 복합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저탄소 녹색산단을 구축하고

녹색 선도기업을 발굴하는 등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연료전지 제조지원센터 구축, 에너지저장형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내실 있는 ‘전주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환경, 기후위기, 폐기물,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전주형 그린뉴딜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자문단은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전략 자문, 그린뉴딜 과제 발굴, 정책제안,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전주 시민햇빛발전소 운영을 돕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선5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숙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반드시 실현해 전주를 그린뉴딜 대표도시로 발돋움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주요 도로에 ‘도시 바람길숲’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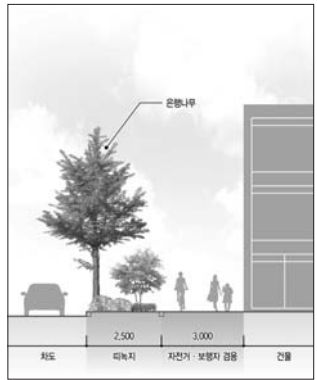
### 내년 12월까지 총 200억원 투입해 백제대로·기린대로·장승배기로 등에 조성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백제대로 등 주요 도로에 바람길숲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백제대로와 기린대로, 장승배기로 등에 ‘도시 바람길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시 바람길숲은 도심의 대동맥인 백제대로를 중심으로 주변도로인 기린대로와 장승배기로까지 약 18km(양쪽 36km) 구간에 숲길을 조성해 외곽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 순환시키기 위한 숲이다. 지난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된다.

시는 올해 ▲백제대로 명주골사거리~사대부고사거리~종합경기장사거리 구간 ▲백제대로 백제교~효자광장 구간 ▲기린대로 추천대교~한백교



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구간은 명주골사거리~사대부고사거리 구간이다. 또 간선도로인 접 학교와 관공서, 아파트, 보행자도로 등 12곳에는 소규모 디딤숲이 조성된다.

이어 내년에는 백제대로(효자광장~꽃밭정이사거리)와 장승배기로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백제대로 구간의 경우 넓은 보도의 포장면을 줄이고 녹지면적을 넓혀 숲길이 조성된다. 보도 폭 6.5~10m 내에 1.6~2m에 불과했던 녹지 폭이 3.5~5m까지 확대된다. 녹지공간에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가 식재된다.

시는 도시 바람길숲이 조성되면 ▲모악산, 고덕산, 목방산, 건지산, 황방산 등 전주를 둘러싼 외곽 산림과 근린공원 ▲만경강, 전주천, 삼천, 소양천 등의 물길 ▲공원과 기존 시설녹지, 완충녹지 등 소규모 녹지 ▲도심 가로수 등이 녹지·하천 생태축으로 연결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열섬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후백제를 건국한 전환이 쌓은 것으로 알려진 동고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11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장에서 후백제전주성(동고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44호인 동고산성은 전주시 교통과 대성동이 접한 산줄기를 따라 벽이 형성된 포곡식 산성으로, 성벽과 문지(門址)의 축조 방식, 건물지의 구조와 형식, 출토 유물의 양상 등을 통해 후백제 전환왕과 관련된 유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화재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동고산성 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역사적 가치와 특성을 규명해 사적 승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석 공주대학교 교수는 “동고산성은 전환의 옛 궁터로 전해온다는 기록이 있지만 확인할 만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는 실정”이라며 “성벽 최하단 성돌이 일반 성돌보다 크고 돌출된 부분 등이 축성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라고 설명했다.

김원중 전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실장은 “최초의 발굴조사 시에는 규모 면에서 궁전이라는 견해도 주장됐지만, 성문 및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양성이 아닌 후백제 도성의 판나 성 역할을 하는 도성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여러 차례의 개축 과정에서 성벽의 통과선을 달리하고, 견치석으로 다듬은 성돌을 면석으로



전주시는 11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장에서 후백제전주성(동고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용한 것, 주춧돌지 및 성벽에 접한 대형건물의 재건축 등이 역사적인 전환점으로서 이뤄질 수 있는 대사업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는 “동고산성은 후백제의 왕도가 전주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가 큰 유적으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복원계획, 경관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근린공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사적인 유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재운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객장근 군산대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일자리사업 강화

전주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경제활동 및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공·민간기관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전주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고용 실행 방안 연구’를 실시한 시는 오는 6월까지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용역을 통해 시는 장애인의 일자리 육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실정에 맞

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해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일자리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민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사회연대협의체’를 운영한다.

사회연대협의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장애인기업연합회, 전북장애인재활협회 등 12개 기관의 실무자로 꾸려졌다. 향후 협의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전주형 장애인일자리 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등 협업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의 장애인고용 이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기관장 중심의 협력체계도 별도로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추진해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사를 배치했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사서보조 직무를 발굴해 전국 최초로 특수직렬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선5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